

# 동물보호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및 추가 제안서

2010. 08. 30.

(사)한국동물복지협회

(133-070)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307-18. T 02-2292-6337. F 02-2292-6339. E mail-animal@animals.or.kr

## 동물보호법 입법 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사)한국동물복지협회의 회원과 싸이월드 일촌을 포함한 29,600명은 동물보호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농림수산식품부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금번 동물보호법 개정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생명 존중의 사회로 한층 진작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은 최초 제정된 1991년 이래로 본래의 목적을 살리지 못하고 실효성 없는 선언적 의미로써만 존재하다가 2007년 2월에서야 조금 더 구체화된 내용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동물 보호 정책이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에서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현 한국 사회의 현실을 반영해주지 못하고 국제 사회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도에서 개정되었습니다.

동물 소유권 제한의 문제도 재산권과의 사이에서 논란이 있었던 과정은 있었으나 동물은 생명을 지닌 존재라는 점에서 생명권의 객체로써만이 아닌 불필요한 침해에 대하여서는 생명권의 주체로써 인정되며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제한을 두는 것이 국제적인 흐름입니다. 한편에서는 동물보호가 국가 경제력에 비례하여 발전하는 것이라 하는 주장도 있으나 이는 동물을 이용하는 것에 익숙해진 사회가 동물 보호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으려는 인식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약한 나라들도 우리나라보다 강력한 동물보호법을 두고 있는 사례가 많으며 한국은 더 발전된 동물보호법을 제정할 수 만큼의 국제적인 위상도 있는 나라입니다.

발전된 동물보호법은 우리 사회의 생명존중 의식의 정착에 기여하고 인간과 동물이 자연 속에 공존하는 가운데 인간 삶의 질을 한층 더 향상시키는 작용을 할 것이라 기대하며 동물보호법 개정 의견을 제안하오니 금번 법률 개정에도 적극 수용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2010년 8월 30일

(사)한국동물복지협회 상임대표 조 희 경

# 1. 동물보호법 입법 예고안에 대한 수정 제안서

2010. 08.30

(사)한국동물복지협회

입 법 예 고 안	수 정 안	제안 사유
<p>제5조(적용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1.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른 야생동물</p> <p>2.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천연기념물 동물</p> <p>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포유동물</p> <p>②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식용목적으로 도살하거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관련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제5조(적용의 제한)</p> <p>①(현행과 같음)</p> <p>1.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가축을 식용목적으로 도살하는 경우</p> <p>2.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수렵하는 경우</p> <p>3.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천연기념물 동물의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p> <p>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관련 조치를 하는 경우</p>	<p>「야생동·식물보호법」 「문화재보호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현행 「동물보호법」의 적용대상 동물이 중복되어 관련 업무를 시행할 때 실무상 혼란이 발생한다는 것이 개정의 주요 목적이나 현행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8조와 「문화재보호법」 제 31조 중 동물학대 위반 시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고 「야생동·식물보호법」의 경우 학대조항이 한정적이라 이들 법률의 대상 동물이 학대를 당했을 때에는 동물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해야 함.</p>

<p><b>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b></p> <p>②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하는 때에는 농림수산물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하며 <u>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에 한한다)이 생긴 때에는 즉시 이를 수거하여야 한다.</u></p> <p>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은 등록대상동물의 유실·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동물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게 하거나 <u>특정 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u></p>	<p><b>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b></p> <p>②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하는 때에는 농림수산물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은 등록대상동물의 유실·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동물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게 하게 할 수 있다.</p>	<p>② 동물의 배변 처리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해 규제장치가 있으며, 배변 처리 관련은 동물보호의 목적과 관계되지 않는 사항이므로 동 법에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p> <p>③ 동물의 특정 지역 사육 금지 및 출입 규제 조치는 과도한 해석 시 공동주택 등까지 확장할 수 있으며 동 조안은 동물보호의 목적과 관계되지 않는 사항이므로 동 법에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필요하다면 식품위생법 등 동물출입이 제한될 수 있는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규제토록 하여야 함</p>
--	--	--

<p><b>제17조(동물의 반환)</b></p> <p><u>2.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동물의 소유자등이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u></p> <p><u>3. 제 13조 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이 경과한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동물의 보호비용을 제 18조제2항에 따라 부담한 소유자가 그 동물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u></p>	<p><b>제17조(동물의 반환)</b></p> <p><u>2.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물의 소유자등이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u></p> <p>3호 삭제</p>	<p>소유주를 알 수 없던 피학대견의 소유주가 나타났을 경우의 반환이나 학대자가 피학대동물의 보호 비용을 부담하고 반환받을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할 시 피학대동물이 다시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게 되어 동물보호의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삭제.</p> <p>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비용 부담은 실비 적용 수준이므로 학대자에게 비용 부담을 하게 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이 크다고 볼 수 없음.</p> <p>‘소유권 제한’ 조항 신설을 제안함</p>
<p><b>제35조(영업의 신고)①</b>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b>제35조(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의 등록)</b></p> <p><u>①(현행과 같음)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동물을 판매의 목적으로 생산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업을 하거나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u></p>	<p>개정안은 영업등록제를 신고제로 완화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확보하고 영업자의 편의성을 제고한다는 취지이나 이는 동물판매업을 관리하고자 한 동물보호법 본래의 개정 취지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현행 유지.</p>

<p><b>제38조(교육)</b> ①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와 그 영업 행위를 하다 제39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해당 영업자는 동물의 보호 및 공중 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p>	<p><b>제38조(교육)</b> ①(현행과 같음) <u>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동물판매업자 및 동물장묘업자와 그에 고용되어 영업에 종사하는 자는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등에 관하여 교육을 받아야 한다.</u></p> <p>②<u>동물판매업자 등은 그 종업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u></p>	<p>영업을 하려는 자와 동물을 판매 영업하는 종업원 등이 교육을 받아야 동물보호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음</p>
---	---	--

## 2. 동물보호법 개정 추가 제안서

2010. 08. 30

(사)한국동물복지협회

현 행	개 정 안	제안 사유
<p><b>제2조 (정의)</b>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동물"이라 함은 소·말·돼지·개·고양이·토끼·닭·오리·산양·면양·사슴·여우·밍크 등 척추동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p>	<p><b>제2조 (정의)</b>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동물"이라 함은 소·말·돼지·개·고양이·토끼·닭·오리·산양·면양·사슴·여우·밍크 등 척추동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물과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척추 동물을 말한다.</u></p>	<p><b>[개정 제안 이유]</b></p> <p>동물보호법의 기본 취지가 동물에 대한 불필요한 학대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나 바닷가재뽑기 기계 등의 게임물에 살아있는 동물을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며 무척추 동물이 학대에 방치되거나 청소년의 정서에 영향이 미친다는 여론 등이 조성되고 있는 바 살아있는 동물을 게임 등에 이용하는 것에 제한을 두기 위하여 동물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p>
<p><b>[신설]</b></p>	<p><b>[신설]</b></p> <p><b>제4조의 2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등)</b></p> <p>① 동물의 보호·관리와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자문과 심의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동물복지위원회를</p>	<p>동물보호(복지)법을 시행하고 있는 대다수의 국가에서 동물복지위원회를 두고 있음.</p> <p>영국 등의 서구권을 비롯해 일본, 필리핀, 싱가포르, 대만 등 아시아에서도 적극적으로 채택하여, 동물보호 관련 행정에</p>

	<p>둔다.</p> <p>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과 위원장은 농림수산부 장관이 위촉한다.</p> <p>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되,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1. 관계 공무원</p> <p>2.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동물보호단체장 또는 민간동물단체의 장이 추천한 자로써 전체 위원의 1/3이상을 둔다.</p> <p>3.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p> <p>4. 동물 관련 학계 전문가</p> <p>5. 축산 관련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p>	<p>관계 전문가들과 시민들의 참여가 주어 져 보다 실질적인 동물보호정책이 제정 및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p> <p>또한 현재 한국에는 동물보호·복지 전문 교육이 없는 현실과 더불어 공직자들의 잦은 부서 이동은 동물복지 업무의 일관성 및 전문성 결여의 공백을 대신할 기구가 없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됨. 따라서 동물복지위원회의 구성은 일관성 있는 동물복지 행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p>
	<p><b>제7조 (동물학대 등의 금지)</b></p> <p><b>[신설]</b> ②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p> <p>4. 동물을 대상으로 <u>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고 피할 수 있는 물리적 고통이</u></p>	<p>최근 들어 동물을 학대하는 사례를 인터넷에 올려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시키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동물을 개인적 오락과 유흥의 대상으로 괴롭히는 영상</p>



	<p>나 심적 고통을 가한 것이 명백하거나 동물이 그러한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적절한 조치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행위.</p> <p>⑤ 동물을 학대하는 등의 행위를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장소 또는 인터넷에 공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은 제외된다.</p>	<p>을 유포하는 사건도 발생한 바<sup>1)</sup>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동시에 노출을 통해 사회적 관심을 유도해 가학증을 유발시키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노출에 대한 규제가 필요함.</p>
<p><b>제8조(동물의 운송)</b> ① 동물을 운송하는 자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1. 운송 중에 있는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급격한 출발·제동 등으로 충격과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운전에 유의할 것</p> <p>2. 사용하는 차량은 동물이 운송 중에 상해를 입지 아니하고 급격한 체온변화, 호흡곤란 등으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할</p>	<p><b>제8조 (동물의 운송)</b> ① 동물을 운송하는 자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p>1. 운송 중에 있는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급격한 출발·제동 등으로 충격과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운전에 유의할 것</p> <p>2. 사용하는 차량은 동물이 운송 중에 상해를 입지 아니하고 급격한 체온변화, 호흡곤란 등으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p>	<p>동물이 운송 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축산물의 품질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의 연구자료<sup>2)</sup>가 있음. 인도적인 운송은 동물복지와 더불어 축산업의 생산성에도 기여하므로 인도적인 운송 규정을 권고 사항이 아닌 준수 사항으로 규정하여야 함.</p>

<p>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p> <p>3. 병들거나 어린 동물 및 임신 중이거나 젖먹이새끼가 딸린 동물을 운송할 때에는 함께 운송 중인 다른 동물에 의하여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칸막이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p> <p>4. 동물운송 차량에 동물을 싣고 내리는 경우에는 그 동물이 충격과 상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p> <p>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동물운송차량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정하고 이에 적합한 차량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p> <p>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그 밖에 동물운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권장할 수 있다.</p>	<p>3. 병들거나 어린 동물 및 임신 중이거나 젖먹이새끼가 딸린 동물을 운송할 때에는 함께 운송 중인 다른 동물에 의하여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칸막이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p> <p>②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u>동물운송차량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u></p> <p>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그 밖에 동물운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권장할 수 있다.</p>	
<p><b>[수정 조문] 제9조(동물의 도살방법) ①</b> 「축산물가공처리법」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가스법·전살법(電殺法)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방법을</p>	<p><b>제9조 (동물의 도살방법) ①</b> 「축산물가공처리법」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가스법·전살법(電殺)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u>출</u></p>	<p>축산물 가공 처리법이 정한 가스법·전살법 등이 가축의 직접적인 사인이 아니고 인도적인 죽임을 위한 기절의 단계에서 시행되는 것이므로 충분히 기절 상태에 이르게 함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p>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u>분히 기절 상태에 이르게 한 후 고통을 최소화하여 죽여야 한다.</u>	
<p>[수정 조문] 제23조 (동물실험의 원칙)</p> <p>[신설]⑥ 항</p>	<p>제23조 (동물실험의 원칙)</p> <p><u>[신설]⑥ 동물실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하여야 한다.</u></p>	<p>현행 법에서는 동물실험기관은 동물실험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동물실험에 대한 사전 심의를 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않아도 규제할 방법이 없어서 법의 실효성이 없음.</p> <p>영국 등은 동물실험자격증 소지자가 실험을 하게 하는 등 동물실험의 요건을 보다 강도 높게 운영 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국가에서 동물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는 것은 기본적인 의무사항으로 채택하고 있음.</p> <p>대표적으로 미국의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은 동물실험위원회의 승인 증명서가 없으면 연구기금조차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싱가포르 등은 승인을 받지 않고 동물을 실험에 사용했을 경우 10,000\$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음.</p>

<p>[신설]</p>	<p>[신설]</p> <p>제 27조 (소유권 제한)</p> <p>① 제1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동물보호감시관은 법원에 대하여 동물학대행위자의 동물에 대한 소유권, 임차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이하 '소유권 등'이라고 한다)를 당해 동물이 소재한 시.군.자치구 또는 법 제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민간단체에게 양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있어서 법원은 동물의 소유자가 당해 동물을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것이 동물의 생명과 안전, 복지를 위하여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 동물의 소유자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을 때까지 해당 동물 대한 소유권 등을</p>	<p>동물학대자로부터 피학대동물을 격리하여도 소유권에 제한을 두지 않아 현행 법의 실효성이 없으며, 정부 개정안 제 20조 동물의 소유권 취득으로는 피학대 동물에 대한 안전 보장이 미흡함.</p> <p>동물은 비인간 동물과 재물을 중간 존재로써 국제적으로도 재물로써의 동물과 소유권 제한 등에 논란을 거쳐 현재 대다수 나라의 선진 사례에서는 피학대 동물의 소유권 제한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음.</p> <p>미국의 법원은 기소된 자에게 소유하거나 돌보거나 어떤 동물과의 접촉도 금지할 수 있으며, 동물을 즉각적으로 공인된 입양 공적 기관으로 옮기게 할 수 있으며 그 기관은 법적 처분권을 가지고 법원에 기소된 사람이 동물을 돌보거나 소유할 수 없다는 증거를 제출할 수 있음. 싱가포르에서도 동물을 몰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p>
-------------	--	--

	<u>이유로 당해 동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u>	
[신설] 제46조 (벌칙)	<p>[신설] 제46조 (벌칙)</p> <p>④ <u>제7조 제5항, 제11조 제6항에 해당</u>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동물학대와 실험동물 규정에 따른 조항의 신설에 따라 벌칙조항이 마련되어야 함.

- 
- 1) 동물복지협회는 싸이월드에 개를 돌리고 내팽겨치는 등 심각하게 괴롭히는 영상을 올린 사람을 동물학대로 고발하였으나 조항이 없어 처벌이 불투명함 (2010년8월23일)
- 2) 농림수산식품부-「이상육발생 감소를 위한 비육돈의 행동 분석 및 취급 기술개발」 2003. 김두환.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동물 복지와 축산 품질」 2005. 김동훈, 박범영  
 외 국내외 다수의 연구자료 있음